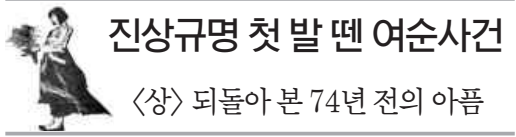


반동 지목 ‘손가락 총’에 참수·총살...무자비한 주민 학살



진상규명 첫 발 댄 여순사건

〈상〉 되돌아 본 74년 전의 아픔

‘국가보안법’, ‘빨치산’, ‘빨갱이’ 등 극단적 반공주의 산물의 단초는 74년 전 발발한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오랜 기간 언급이 금기시 됐다.

다행히 지난해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인정했고 기념식도 정부 주도로 개최한다.

‘반란’이란 오명 아래 손가락질 받아온 유족들에겐 감격스런 일이지만, 희생자 대다수는 고인이 됐고 유족들도 70~80대 고령이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이에 광주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여순사건의 진실과 미완의 과제에 대해 보도한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학살

여수 14연대 제주 파병 거부 단초군·경, 협력자 색출 명목 대학살
정확한 희생자 수도 확인 안돼
전남도는 1만1131명으로 파악
빨갱이 누명 유족들 수십년 고통
피해자 조사·명예회복 서둘러야

이 진행됐다.

하지만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올해까지도 정확한 희생자 규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명예회복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17일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전남도가 파악한 여순사건의 희생자 수는 총 1만1131명에 이른다.

이는 광주일보 설립자인 남병 김남중 선생이 편 집국장으로 있던 호남신문의 1949년 11월 11일 보도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정확한 희생자 수는 확인된 적이 없다. 하지만 여순사건 전

문기들은 전남도의 희생자 수를 가장 근접한 수치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희생자를 낸 여순의 비극은 제주 4·3 사건에서 시작됐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을 거부하면서 발발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서 여순사건을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명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전까지의 전남·전북·경남 일부지역 민간인 집단희생과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단독정부 수립 반대 무장봉기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여수 주둔 제14연대 일부 병력을 제주도로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10월 19일 오후 8시, 지장수 주임상사를 비롯한 제14연대 병사들은 같은 민족을 진압할 수 없다고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했다.

14연대는 여수에 들어온 후 ‘제주도출동거부병사위원회’ 이름으로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모든 애국 동포들이

여! 조선 인민의 아들인 우리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도 파병을 거부한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가 되려고 봉기했다”고 밝히고, ‘동족상잔 결사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여수에서는 수천 명이 참가한 인민대회가 열리고 경찰을 체포하고 친일파의 은행예금을 동결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식량 창고를 개방해 쌀과 물자를 시민들에게 배급했다. 우익인사에 대한 인민재판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한반도에서 소련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하나로 인식하고 철저한 진압 방침을 세워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다.

육군총사령부는 21일 광주에 반란군도발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같은 달 24일 여수를 공격한다. 비행기까지 동원하는 등 군 역사상 최초로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펼친 끝에 27일 여수-순천과 인근 지역 탈환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진압군과 경찰, 우익단체가 다시 점령한 여수-순천지역에서는 협력자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손가락 총’에 의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됐다. 14연대 정규 병력은 이미 지리산 산악지대로 탈출한 상황이었다. 이들이 바로 ‘빨치산’으로 불리게 됐다.

여수에선 10월 26일부터 종산국민학교(현 중앙초) 등 공터에서 ‘부역자 심사’가 진행됐다. 당시 손바닥에 총을 쏜 흔적이 있는 사람, 흰 고무신(당시 인민위원회가 보급)을 신은 사람, 국방경비대에 지급된 미 군용 팬티를 입은 사람 등 매우 자의적인 심사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경찰이나 우익인사가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혐의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즉석에서 참수·총살됐다.

여순사건의 영향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는 등 이때 형성된 반공체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형성하는 근간이 됐다.

하지만 군인들의 반란이었다는 이유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군사 정권을 거치며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70년 전의 아픔을 기억하는 지역민들도 자칫 빨갱이로 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속으로만 삭였다. 이러한 세월이 74년이나 흘러버린 것이다.

이규중 여순사건 10·19항쟁 전국 유족 총연합회장은 “우리는 유족이 되고 싶어서 유족이 된 것이 아니다”면서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지금에서야 시작됐지만 더딘 걸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대 중국인 학생 퇴학처분 공고문에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문구 포함 논란

학생들 “창피하다” 댓글 잇따라
학교측 “전체 문맥 보고 판단을”

호남대학교가 중국인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리는 공고문에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지난 16일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의 중국어로 된 ‘처분공고’ 사진이 포함된 게시글이 올라왔다.

처분공고에는 ‘호남대학교는 협중 발언으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 22학년 경영학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퇴학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지난 1일 밤 10시께 기숙사 룸메이트와 말다툼을 해 학우들과의 화합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처분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또 대만을 찬양하는 노래를 틀고, 중국 국기(오성홍기)로 신발을 닦는 등의 행동으로 중국인 유학생들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학생 기숙사 관리 방침을 여러 번 위반했음에도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었다는 점도 공고내용에 포함됐다.

이에 학교측은 지난 7일 A씨의 보호자에게 연락 후 A씨를 자퇴처리 하고 해당 ‘처분공고’를 학생에게 보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교가 ‘한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해왔다’(韓國支持一 介中國原則)는 문구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문제의 퇴학처분 공고문은 누군가 익명으로 에브리타임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에브리타임에 처음 게시된 ‘우리학교 대단하네’라는 글에는 “학교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지해왔다’는 말을 써도 되냐”는 내용이 담겼다.

댓글에는 ‘대학교 이름 걸고 창피하게 뭐 하는 거냐’, ‘중국 국기로 신발을 닦는다는 등(A씨)행동은 잘못됐지만,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굳이 했어야 했다’, ‘유학생 받아서 장사하려면 유학생이 많은 중국편 들어야 하는 거냐’는 등의 글이 달리면서 학생사이에 논란이 번지고 있다.

호남대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된 문구는 중국인 교수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해당 문장만 보지 말고 상황과 전체 문맥을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수질 개선 위해 ‘EM효공’ 던져요
광주시 서구 직원들과 ‘바르게 살기운동 서구협의회’ 회원들이 17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EM효공’을 던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상한 판결’ 광주시 행심위 위원 등 내사 착수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광주시 서구에서 조지한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건축 허가 반려 결론을 뒤집은 것(광주일보 10월 4일자 1면)과 관련, 경찰이 행심위 위원과 공무원 등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도 서구청이 고발한 매월동 고급 주택단지 조성사업 사업주와

건축사 등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표면과 건폐율·용적률을 허위로 작성한 건축허가 설계도서를 서구청에 제출하고 위법하게 건축을 진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 6월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건축허가 과정의 불법성 등을 수사해 왔으며, 지난 4일 언론 보도 이후 추가로도 시개발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주·건축사가 공모한 정황 등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행심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집고 건축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부 공무원 등의 개입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주택법 적용 등 고의적으로 관련법을 무시한 정황 등이 있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행심위가 이례적으로 3차례나 심리를 개최하고 위원 대다수를 교체해 가며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등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논란이 된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한 전세정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지난 주 광주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